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5-9호

발행일: 2025. 10. 20. (월)

제429회 국회(정기회, 2025. 9. 1. ~ 2025. 12. 9.)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제도화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29회 국회(정기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5년 9월 11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3건, 9월 25일~29일 열린 제9차 본회의에서 7건 등 모두 10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29회 국회 제4차, 제9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해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체계를 재설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3) 국회 위원회의 위증 등의 고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체계에 명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29회 국회의 2025년 9월 11일, 25일~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0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국회운영위원회(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운영위원장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장
3	법제사법위원회(3)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5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6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7	행정안전위원회(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8	보건복지위원회(1)	문신사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9	기후위기 특별위원회(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10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1)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장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제도화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제도화

개요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은 대한민국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Net Emission)’을 0으로 만들겠다는 국가 목표를 의미합니다. 즉,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과 흡수·제거되는 양을 같게 만들어 탄소중립(net zero) 상태를 달성하겠다는 장기 전략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 동향과 기후위기 대응 요구를 반영하여, 2020년 10월 28일에 ‘2050 탄소중립 선언’과 12월 10일 ‘2050 탄소중립 비전’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저탄소’ 기조는 사실상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을 전제로 하되 그 배출량을 줄여보자는 수준에 머문 것이기 때문에 ‘탄소중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녹색성장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 법을 제정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의 통과 후 같은 해 9월 24일 제정되었으며,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탄소중립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 보완 및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배출권거래제 강화, 무상 할당 비율 조정, 시장 안정화 장치 마련 등의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회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의 법적 명시 및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적 보완 조항들이 반영된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관련하여 [입법정책브리핑 제2024-2호 탄소중립 이행 방안 마련](#), [제2023-9호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활성화](#), [제2021-1호 2050 탄소중립](#) 이슈 등 참조).

2025년 9월 29일 본회의에서는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체계에 명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제고하는 등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현행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되어,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과 급변하는 탄소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최근 배출권 시장에서는 배출량 감소 기업에 대한 무상할당, 단기적 투기·시세조작 가능성, 중개회사 파산 시 투자자 예탁금 보호 미흡, 검증기관·협회 관리 부실 등 제도적 취약점이 지적되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여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력을 높이며,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 간소화를 하는 한편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강력한 벌칙을 도입하고,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보호·정보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주무관청이 배출권 거래소까지 직접 검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검증기관·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확대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하는 실효적 감축수단이자, 공정하고 안전한 저탄소 시장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5-09-29 (원안가결)

정책 동향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환경부, 국조실)

□ 과제목표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책임 달성(18년 대비 40% 감축)을 위한 이행기반 조성
- 2035년 감축목표 수립 및 2050년까지 장기 감축 로드맵 마련
-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탄소중립산업 및 기후 신산업 육성

□ 주요내용

- (2030 감축목표 달성) 산업·건물·수송·전환 분야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 수립, 기업의 실질적 탈탄소 전환을 위한 향후 5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 (2035 이후 로드맵 수립)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 수립(25.1F), 미래세대를 고려한 탄소중립 장기 감축 로드맵 마련
- (이행기반 강화) 기후대응기금 수입원 확충, 예비타당성 효과 분석 시 탄소지감효과 반영, 대중교통 건설사업 등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 기후 신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신속한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 녹색 공공조달 확대, 지역 소재 기후테크 기업을 우대하는 특화 펀드 조성,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교체 시 전환지원금 지원, 전기차 충전소 확대
- (국민참여 확대) 기후 공론장 마련(기후시민회의), 탄소중립 국민 실천에 대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정부-시민사회 협력 탄소중립 실천단 운영
- (국제사회 논의 주도) 감축·적응·그린ODA 분야 국제논의 주도 및 지원 확대, 한·중·일 기후위기 대응 공조 강화, 남북 기후-환경협력 과제 발굴·추진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관계부처 합동, 2025. 8. 22.)

②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금융 확대

【온실가스 감축】

- (감축 로드맵) 기존 2030 NDC보다 강화된 **2035 NDC 수립·제출** 및 미래세대 등을 고려한 **장기(‘31~‘49년) 감축 로드맵 수립**
- (배출권거래제) **4기(‘26~‘30년) 배출권 할당시 엄격한 총량 설정 및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적용 기업의 감축유인 제고**
- (탄소크레딧)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해 탄소감축 인센티브 확대(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 방향 발표, 25.下)
 -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블록체인) 신설, 중소기업 자발적 탄소 감축 체계 연계 등 크레딧 시장 기반 조성
 - 크레딧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 가이드라인 마련
- (국제탄소시장 참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과 신뢰성있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표준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국제탄소시장 진출 지원**
- (해외 탄소규제 대응) 탄소국경세(CBAM) 등 대응 위한 지원 및 기반구축
 - 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을 원스톱서비스로 밀착지원하고, 공급망 내 기업들과 탄소배출 정보를 주고받는 데이터플랫폼 구축(‘28년)
- (정의로운 전환)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사업재편 컨설팅, 근로자 재교육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 및 고용안정 지원** 등 지속 추진

출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 정부 업무보고(환경부, 2025. 1. 10.)

핵심과제 ② :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

감축목표	■ (NDC) 2030 NDC(‘21) 이행관리	■ (新) 2035 NDC 마련 및 UN 제출(연내) ■ (新) 50년까지 복수의 감축경로(안) 마련(‘25.下), 법제화(‘26.2)
탄소시장	■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중심,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및 시장조성자 등만 시장 참여	■ (强) △유상할당 대폭상향(발전), (新) △기관투자자도 시장 참여(‘25.2~), (新) △민간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25.上)
녹색투자	■ (녹색 금융) 중소기업 약 15조원 투자 건인 ■ (녹색 조달) 녹색인증 제품 공공조달(조달청, 의무구매(환경부))	■ (强) 약 3.5조원까지 확대(채권, 유동화증권 고려 시 더 확대) ■ (新) 중소·중견기업 녹색전환보증 도입(1,400억원) ■ (强) 환경부·조달청 협업을 통해 녹색기술·제품 조달가점 및 대상제품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25.上)
전차	■ 성능에 따라 전기차 구매보조금 차등적용 ■ (충전기반) 이동거점 → 급속, 생활거점 → 완속충전기 중심 충전기반 확충	■ (新) 다자녀가구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생애 첫구매 청년 기본 국비보조금의 20% 추가지원 등 ■ (强) 생활공간 급속 확충, 스마트제어 도입 및 이동형 충전서비스 확대
플라스틱	■ (컵보증금제) 세종·제주 선도 시행 ■ (재생원료) 사용목표 3%	■ (强) 선도지역 지속추진 + 놀이공원·카페거리·프렌차이즈 등 자율시행 확대 ■ 10%(‘30년까지 30% 목표)

출처: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환경부 보도자료

참고 자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김소희 의원안: 배출권 할당의 업종 구분단위 변경 등 2025. 8.

박정 의원안: 배출권 시세조작 행위 금지 규정 신설 등 2025. 8.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2035 NDC와 장기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현안과 과제 : 국회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 : 국회 세미나](#) 국회의원 정책자료

[기후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조직과 위원회 개편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파리협정 준수와 국민기본권 보호를 위한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회사무처 정책자료

[우리나라 대표 온실가스 관리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처SNS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 사건 결정](#)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 의의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5. 2. 12.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 재탈퇴를 결정함에 있어 2017년 탈퇴 때와 같이 동 협정이 미국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해외 기후 자원 지원 계획을 철회하였다. 2025년 재탈퇴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 및 보호무역주의와 결합해, 경제적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미국식 환경 리더십의 표출이다. 반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보다 치열해진 생존경쟁 속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상 에너지전환을 충실히 이행해 에너지안보와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 국익에 부합하도록 한 · 미 청정에너지동맹의 지속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배출권거래제 쟁점과 과제](#) 한국환경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2. 7. 13.

1. 배경 및 현안

- 탄소중립 구현 시대에서 탄소가격체계 확립은 주요 핵심 과제
- ETS는 탄소가격을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
- 국내 ETS의 의미 재정립 및 시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점검 필요
- ETS와 관련된 국내외적 상황 변화 중
- 국내적으로는 에너지전환 전개 상황과 연계 및 새 정부 기후 ·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과 밀접
- EU CBAM 및 파리협정 6조 등 국제환경 변화 반영 필요

2. 연구 목적

- 새정부가 파악해야 할 국내 ETS의 현안 및 핵심 이슈 정리 · 분석
- 현안 분석을 통한 국내 ETS의 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 우선 추진체계 제시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박성철 변호사
02-6200-1777
scpark@jipyong.com



신용우 변호사
02-6200-1974
ywshin@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